

발 언 문

발언 1. 최현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낮은 성인지로 담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워 담기 민망해도 기회 줄 때 철회하라”

국민의 힘 당내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낮은 성인식 수준에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심각한 차별과 혐오, 젠더 갈라치기, 증오 선동이 난무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젠 논리적 근거도, 합리적 설명도 없이 그 공약을 지키겠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성평등 핵심 부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종이 한 장 결재하면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되었다면 왜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여성단체는 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여성단체 여성들은 7시간씩 전화밖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심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장애 여성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 대응에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든 일상인데, 우리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로 타깃이 되어 마치 여성가족부의 21년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한 치의 고민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한국 사회구조적 성차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실현은 세계 각국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 가치라고 보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처를 따로 두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린아이 고집부리듯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 성폭력, 근친 성폭력, 장애 여성 성폭력... 우리는 갈기갈기 찢어진 부서로부터 과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찢어진 어느 부서에서 이들을 책임질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은 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어느 부서에 자신이 장애인이며, 피해자라고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아동학대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찢어진 부처에서 한참을 돌리다 가정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는 '타 부처로 업무 이관할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는다.

도대체 여성가족부에 어떤 권한과 권리를 주었고, 얼마의 예산을 주었기에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국민 통합을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는 변함 없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민의 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하라!
성인지감수성이 제대로 된 국민의 힘 의원이라면 '여성'이 무시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못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개인의 것인가? 개인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는 이런 이해 없는 정권 교체용 주장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을 밟고 있는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지원상담소 그리고 여성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여성으로써 국민으로서 배제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시로! 끝까지! 맞설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마치 국민에게 지키려는 약속인냥 운운하며 끝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어가고,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타 부처로 업무 이관 할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는 아이 사탕 물려주는 방식'의 간담회를 이어간다면

우리 여성과 여성단체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은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발언 2. 김미경(현장상담센터협의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저는 경남 김해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코로나 시대에 돌봄노동에 허덕이고 경력단절을 뼈저리게 겪다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에서 사무지원을 맡은 김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인수 시간은 채 1시간도 안 돼서 끝마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역사적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선자가 밝히는 여가부의 문제는 성차별은 이제 없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따라서 부처로서의 여가부는 필요 없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 성별 격차지수에서 152개국 중 102위(세계경제포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유리천장지수 꼴찌(이코노미스트),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 4.2%로 세계 평균의 5분의 1 수준(딜로이트), 여성 국회의원 OECD 평균(31.6%)의 3분의 2 정도인 19% 수준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2020년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가 91%를 차지할 정도로 성범죄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 착취가 널리 확산해 있고 기업의 채용 성차별이 관습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성들의 실직이 늘고 육아, 가사노동 등 무임 돌봄노동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온라인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각도로 가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 성별 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전진시켜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차별적 사회에서 그나마 그 격차를 줄여온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의제는 주요한 국정과제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혐오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서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약속한 대한민국 통합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는 성별 때문에 정상 가족 프레임 속에 고립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당연한 주인으로 세워 통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평등 세상을 향해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으로 더욱 강력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3. 도경은(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4.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발언

(최민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독)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 여전히 젠더폭력의 온상, 성매매 현장의 구조적 상황을 보라, 아직 풀어가야 할 성평등 세상이 오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저는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는 지음입니다. 저는 이미 탈성매매 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성매매 구조는 강력하고, 그 안에는 십 대부터 모든 연령대의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 착취가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를 흐리며,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즐겼다’, ‘여성들이 돈 벌려고 그런 거다’, 라는 주장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강력한, 거대한 성매매 구조가 디지털 성 착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유입되었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공고히 하는 체제입니다. 그 성매매를 끝장내기 위해, 여성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데,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소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별로 인한 착취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너무도 여처구니없는 현실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포털사이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검색하면 ‘성매매 합법화’가 연관검색어로 나옵니다. 또한 질문란에는 ‘여성가족부 없으면 성매매 합법화시킬까요?’, ‘성매매 합법화 언제 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곧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될까요?’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구조적 성차별적 착취의 현장이고, 그것은 당연히 모두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다는 희망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되는 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성 매수자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그 성 매수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돕는 것을 비난하고, 예산 낭비, 감정정치라 폄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성매매 여성 중 다시 재유입하지 않고, 보통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성매매 경험 여성들을 저격할 때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과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탈성매매 여성 여기 있다고,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더이상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고, 외면하기 바빴던 정부는 권력의 밥그릇 싸움으로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상황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을 증거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마도 많은 당사자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앞에 나설 수 없는 현실조차 힘이 빠집니다. 피해자로 목소리 내지 못하며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의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받던 우리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온갖 멸시를 받으며 우리와 함께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성매매를 여성 착취의 현실로 보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 잣대나 시혜적 보호 안에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실제의 행정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현장에 반영해 왔기

에 우리와 같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그동안 그토록 넘어서고자 한 혐오를 양산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려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는 착취를 착취라 말할 수 없는 여성들, 오히려 낙인찍히고 손가락질당해왔던 이전의 시간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해체’ 일곱 글자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위협 자체입니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당선인의 말은 피해자, 소수자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전히 성매매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여성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미디어에서조차 묻히고 잊혀집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8주년을 맞이하는 현재도 여전히 성매매 여성을 폭력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일하게 성매매 보호법에 대해 이해를 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들이 탈 성매매할 기회조차 앗아가는 것이자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겠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은 다 처벌의 대상으로 치부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도 피해자로 간주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는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탈성매매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과거처럼 여성들을 더 옥죄이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성의 시선, 강자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젠더위계, 젠더폭력의 최전선입니다. 만약 구조적 차별이 없다면 그런 성매매 현장도 없어야 합니다. 성평등 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여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여전히 착취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5.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트랙)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법무부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

○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 기본 단위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이다. 결코 사소하지도, 개인적 차원의 경험도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출발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우리 사회 만연한 여성 폭력 문제는 그 구조적인 차별이 그 중심에 있다. 가정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며,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폭력의 종식이 성평등 사회로의 이행,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무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법무부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의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 이관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1998년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현행 법체계로는 ‘범죄피해자’라는 제한된 범주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에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22년 현재도 법무부는 ‘처벌’이 아닌, ‘가정 보호’가 목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용어 사용 반대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통해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 2019년 가정폭력 범죄자 구속률은 49,873건 중 505건으로 1%이다. 범죄 구성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 중 99%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법무부의 피해자지원 시스템에서는 피해자 지원할 수 없다.

2.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피해자 관점이 없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단순히 피해자 지원을 넘어 젠더폭력을 발생시키는 불평등한 구조와 인권을 기반으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2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된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회복’, ‘가족복지’ 차원이 아닌,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무조건적 폐지, 비슷한 부처별 일렬종대로 세우는 형식이 아닌, 더 강력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여성 폭력추진체계를 실현

할 부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우리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피해자 관점이 없는 법무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며 성평등 관점의 여성 폭력피해자 전담 부처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법무부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성평등 관점의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언 6. 오혜진(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위라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가 선거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폐지하겠다는 것만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We want to hear the promise of the President-elect Yoon Seok-yeol on what to do after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모든 인간이 자기 목적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십시오.

이주여성들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에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이주민이기에 겪게 되는 차별과 폭력배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안에서 폭력을 겪거나 성폭력 등 여성 폭력으로 수많은 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상담소가 유일합니다.

모든 국민이 서로 힘을 합해서 평화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정당 국민의 힘이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성평등 정책 총괄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지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이주여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인 성평등 정책 정부를 마련하십시오.

Create a gender equality policy government in which half of the citizens are women.

발언 7. 박현경(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엇이 두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여성은 국민이 아니며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말과 같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주장은 수없이 불거지는 젠더 차별과 여성 폭력은 개인의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국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성차별, 성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 정책을 생산하고 조절할 막중한 책임 있는 대통령직에 있을 윤석열 당선인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일상이 포르노 그래피가 된 세상, 한국 남성의 2명 중의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고 치킨집보다 1만 개 많은 유흥주점이 존재한다. 접대와 유흥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착취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킨 대한민국의 여성 지위에 대한 민낯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젠더기반 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조롱, 혐오, 차별하는 그 인식을 폐기해야 한다.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재단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친밀한 사이에서, 낯선 거리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Me Too 이후 우리는 변화하였다. 우리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내고, 수 세기 동안 누려온 기득권 남성 권력과 연대에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외침과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회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여성의 몸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세상을 만들며,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부수고, 거리에서, 친밀한 사이에서의 평등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 국가를 운영하고 대표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집권 세력의 인식이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 부디 지금이라도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요구한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국민이다.

발언 8. 김은진(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두레방)

발언 9. 무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강간이 정조를 지키지 못한 일이었던,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이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국산 아동’이던, 촬영물 유포 범죄가 ‘단순히 돌려보는 것’이 때가 불과 5년 전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것이 사이버 성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임을 외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며 너와 나의 불안이고 분노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 폭력이 구조적 폭력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끈질기고 치열하게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2017년 5월 25일 한사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1. 사이버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2.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것 3.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응답을 한 정부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2017년 여가부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민간협의체’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이행실적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임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로써 그리고 정부 부처가 사이버 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협의체 해소 후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로 통합하는데, 이 또한 여성가족부가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절실했던 만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7년 불법 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2020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발전방안 연구, 2021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 방안 등 연구를 진행하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것이 정책과 제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가부가 여성 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 대응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부의 역할은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지원 현장에서 우리는 ‘성범죄’로만 불릴 수 없는 수많은 폭력을 마주합니다. 여성운동이 치열하게 투쟁한 끝에 성폭력과 관련된 많은 법이 새로 생겨나고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범죄’로 모든 폭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여전히 법에 딱 들어맞지 않아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가해자 중심의 법 해석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합니다. 2021년 검찰 검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준강간 사건 4,503건 중 기소된 사건은 1,114건(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16,321건 중 기소된 사건은 5,889건(36%)에 불과합니다. 즉, 사법 절차에 포섭되지 못한, 또는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활동가 상담 지원으로, 무료법률지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여가부입니다. 여가부의 테두리만 벗어나도 사법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여가부가 아닌 범죄피해자지원 체계 속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 및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어야 하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혹은 재판 결과 무죄가 되면 그 순간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임을 우리 현장 단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 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무언가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제대로 된 평가와 비판 없

이 단순 분해하여 역할을 찢어 놓는 것이 진정 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는 아직입니다. 그렇기에 성평등 관점의 여성 폭력 방지 전담 부처로써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필요함을 강력히 외칩니다!

발언 10. 나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항거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이 4글자로 인해 피해와 장애를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따라간 것은 자유의사에 기반한 선택이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법은 판단합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 여성이 피해에 놓이게 된 구조적 차별과 장애 여성의 목소리, 삶의 맥락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지난 20년간 정상성과 장애 무능만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와 법적 기준에 저항하였고 장애 여성들과 함께 동료로서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며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치열하게 연대해왔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장애 여성에 대한 일상의 숨은 차별과 배제를 목격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생활 침해, 강제적인 피임 시술과 같은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 등은 차별 혹은 인권침해로 말해지지도 않습니다. 장애 여성은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되는 '시설화된 삶'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가 입증되어야만 지원 가능한 한정된 자원의 수혜자로 존재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많은 장애 여성은 독립적인 삶, 안전한 주거, 일하고 싶은 욕구, 잘 의존하는 방법 등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며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상상하며 도전합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가해자 처벌을 넘어 장애 여성이 시설화된 삶을 '탈' 할 수 있도록,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제도,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평등 관점은 장애 여성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지난 과정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본연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성평등 가치가 사회적으로 다시 토론될 수 있고, 피해자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 관점이 기반이 된 전담 부처를 반드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여성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자 지원활동이 시설화에 저항하고 권리확장을 위한 투쟁이 되기 위해, 제도와 기준으로 드러날 수 없는 수많은 존재와 동료되기 위해 치열하게 앞으로 투쟁할 것을 약속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11. 변정희(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저는 2012년 호주에서 잠깐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의 성 산업으로 인신매매된 한국인 피해 여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한 민간 활동가 자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의 성매매 업소에 매매된 한인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뛰어난 백인 남성이 포주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방수사국, 빅토리아 주 경찰을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금해 한 점 중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호주 성 산업 내 외국인 여성의 비율 중에서 한국은 태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여성들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성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문점이 이해가 갔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여성 인권은 바닥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정작 머나먼 타국에서 고립되고 착취되었던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고요.

최근 116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될 즈음인 2001년 한국의 상황을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2001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 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 하지만 인신매매, 특히 성 착취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여성부는 이렇게,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내었으면서도 여성 인권은 바닥인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명칭의 변경과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가족부의 일관된 존재 이유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는 20년 넘게 정부 조직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그 결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역도 아니고 우리의 금과옥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으로서, 여성 폭력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원으로서나 성 착취에 반대하는 활동가로서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평가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안일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대안 제시가 너무나도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폭력과 권익증진 업무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안일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나 경찰로 여성 폭력과 권익증진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검토는 법무부나 경찰 조직이 범죄에 대응하는 부처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해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게 겨우 2018년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성 착취 집결지 5분 거리에 파출소와 경찰서가 있는 삶을 살았고, 수사기관과 포주와의 유착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고 실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14년에는 경찰의 함정 수사로 성매매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조차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문제아,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반복되는 피해 속에 놓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 법무부의 선도 보호 체계 속에서도요.

더욱이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성매매 처벌법 속에 그나마 존재하는 성매매 피해자 조항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게 해석하며, 그나마 진일보한 여성 인권의 가치를 담은 법인 성매매 방지법을 윤락행위등방지법 때와 다름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역올하면) 법을 바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법으로도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우리 현장 단체들은 피해자를 잘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성찰과 각성으로, 성매매 관련 판결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성 폭력피해자 전담 부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법무부를 검토하는 인수위의 이 안일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합적인 여성과 남성의 구분으로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당선인은 말했지요. 그러나 여자들은 항상 집합적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은 결국 여자들에게 만만하게, 계속해서 혐오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저지는 상황을 방치하고야 말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성폭력 가정폭력 성 착취를 당해도, 팔자소관이라고 내 탓이라고 체념해왔던 우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여성 폭력과 권익증진 업무의 전문 부서이자 전담 부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쉽게 흩어지지도 쉽게 지지도 않을 겁니다.

발언 12. 이제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윤석열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철폐안을 폐기하고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는 당선 이후에도 반성 없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강력하게 분노한다.

한국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널려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도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별적인 불공정 사례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게 맞다”라는 발언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차별에 대한 이들의 몰이해에 깊이 탄식하는 바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점점 더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의 범죄에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발언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국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든 행정 수반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철폐안을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라.

윤석열은 역대 최소차이로 당선된 후보라는 사실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여성들의 정당한 요구에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 대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여성들은 분명한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저항은 항상 험난했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에 밀려 폄하 당했으며, 때로는 좌절되어 후퇴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현재의 여성 인권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여성들의 투쟁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저항은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싸운 여성들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연대는 시간을 뛰어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은 본인이 내세운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여 일어난 여성들을 두려워하라.

좌절과 무력, 불안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연대를 원동력 삼아 우리는 더 평등한 사회,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발언 13. 민경아(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언을 맡은 전주여성의전화 활동가 민경아입니다.

여성의전화는 198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에서 각 지부가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심터라는 말도 없던 시절부터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던 단체입니다.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부부터 지난 해 22년만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성시민단체들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여성을 보호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 오며 싸워왔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던 것은,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여성 한 명이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과 가부장제 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수십년간 법과 제도를 만들어오며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 데 오늘 날, 우리는 시대가 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며, 여성의 경험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성들이 들어왔던 언어는 '이런 사소한 일로 신고하지 말아라', '사랑싸움이다',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등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83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살인미수, 주변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모두 제외한 숫자입니다. 국가가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숫자만을 집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은폐되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 연인 또는 전 배우자나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경미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거침입, 폭행, 강간, 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살인에 이른 사건들을 보면 이전에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던 특성이 있습니다.

2021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특성이 있어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도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현행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미래가족부'로 변경하며 업무를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해 편재하는 등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편재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피해자 지원만 하겠다는 시혜적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만이 법안을 발의하고 제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의 권한을 갖

습니다. 법안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 위원회 등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평등 담당부서가 독자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과 명칭, 예산, 조직구조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활동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더이상 맞아죽는 여성이 없기 위해서,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서, 피해자가 몸을 숨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성들에게 반복되어왔던 폭력이 다음 세대에서는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가부 폐지가 아닙니다. 여성폭력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다각적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갈 강력한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는 해야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발언 14. 이은주(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발언 15. 김혜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용인성폭력상담소)

발언 16.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저는 이주여성 인권지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김혜정입니다.

202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서 국내 체류 이주민은 총 203만 명으로 여성은 약 90만 명으로 45%를 차지합니다.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으로 사회적 소수자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상담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9,814건, 성폭력 915건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 1997년에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상담소와 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에게까지 적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곳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9곳이 마련되었습니다. 유난히 더디지만 한 제도적 지원도 여성가족부가 전담으로 정책을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이제야 마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여러 방역 정책에서 이주민을 소외시켰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하였습니다. 한국인과 가족을 이룬 이주민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이주여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주여성과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소수자, 취약계층의 이주여성과 이주 배경 아동에 관해 세심하게 귀 기울여 논의하고 정책을 고민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주여성과 이주 배경 아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확장하여야 합니다.

성평등한 이주여성 정책을 강화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발언 17. 김명수(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선언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 폭력 방지 정책 및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업무가 소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회원기관들은 다양한 여성 폭력 현장에서 체험한 피해자 지원 경험을 토대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체계도 성차별 없이 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높은 이혼율,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2. 가정폭력피해자들의 2차 폭력에 직면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 및 법률적인 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유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사법기관에 연계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지원은 전문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계하여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아동이 가족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이러한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는 현재도 수많은 젠더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며, 피해자 지원 기관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으며, 내일도 애쓸 것이다.
5.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피해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폭력피해자들이 많다. 매일같이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더 강력해져야 할 것이다.
6.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어느 쪽도 성차별 받지 않는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관점의 여성 폭력 방지 전담 부처가 존재하여야 함을 강력히 호소한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5여 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들과 함께해 왔고 특히 가해자들의 위협에 노출을 무릅쓰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서 달려왔다. 이제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을 인정하길 호소한다.

그러므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 여성 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 여성 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는

성평등 관점의 성평등 전담 부처에서 다루어라!

발언 18. 이해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움)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단 한 줄, ‘여성가족부 폐지’가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많은 여성 폭력피해자들을 지우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 분석 주요 결과’를 보면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 중 90.9%가 여성 청소년이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전년 대비 61.9%가 증가하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에 따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86.5%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되어 성매매 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모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 인식 속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인식,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밖 청소년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온라인상 익명의 가해자는 가정 안팎의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나 혹은 나의 주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들로 인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청소년들조차 자신이 겪은 일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10대 청소년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을 따지고 그 비난의 대상은 ‘여성’입니다. 여성 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 구매자와 알선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끊임없이 새로운 글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성 구매자들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 및 협박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지울 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윤 당선인은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착취, 데이트폭력 등의 수많은 젠더폭력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 봐야 합니다.

젠더폭력들을 근절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기본 전제로 한 정책과 피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성매매가 성 착취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깊숙이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관점을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그 누가 그 어떤 권력이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